

외국인 주재원 비자(D-7) 요건 완화

‘23.7.10(월),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정책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내 상장기업 및 공공기관의 현지 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근무한 해외 근로자는 D-7 비자를 통해 국내 본사로 파견 가능(최대 3년, 투자금액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)

*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

- D-7 비자 발급은 국내 상장법인 해외법인만 가능해 비상장법인*의 현지 인력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내 파견이 불가능해 국내에서 활용할 수가 없음

* 21년 결산기준 중견기업 5,480개사 중 4,555개사(83.1%)가 비상장법인임(중견련 중견기업 기본통계)

- 중소·중견기업은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, 특히 지방소재 기업은 신규인력 채용도 어려워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

* 중견기업 제조업 신규채용 애로사항 : 적합한 인재부재(44.8%), 지방소재(19.9%),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(15.5%) 순으로 조사(중견련,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)

- D-7 비자 자격요건을 비상장법인까지 확대할 경우 중소·중견기업은 해외현지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가 있어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□ 건의사항

- D-7비자 자격요건을 비상장법인까지 확대